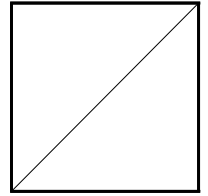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35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1. 29. (제 21 차)	

대신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출 자	위 원 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11. 29.

1. 의결주문

대신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신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하여 대신증권(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련 前·現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지배구조법」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제1항, <별표>

「지배구조법」 제43조(과태료) 제1항 제16호, 제4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제1항, 제4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제2항, <별표2>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다. 관계부서 협의

- 2020년 제26차 제재심의위원회(2020.11.10.) 심의필
- 2023년 제21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3.11.23.) 심의필

<별지>

대신증권(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대신증권(주) :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제43조 제1항 제16호, 제4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 제34조, <별표2>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 임원에 대한 조치

- (前 대표이사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 (부회장 ○○○) 문책경고

- 조치사유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제35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2. 조치사유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에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 대신증권(주)는 ▲▲▲▲▲▲▲▲▲▲ 등의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할 기준 및 상품검토기준 등 상품출시에 대한 내부 심의절차, 출시 후 위험 관리 및 소비자보호, 영업점의 영업행위 통제 등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① ▲▲▲▲▲▲▲▲▲▲의 상품선정절차 생략기준 미마련

- 20xx.x.xx. 이후 신규 출시한 25개 ●●펀드가 복잡하고 다양한 투자 전략 및 TRS 레버리지를 활용한 운용방식 등에 따라 상품에 내재된 위험이나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큰 상품으로 상품출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 투자대상을 사전에 알 수 없는 블라인드펀드는 ▲▲▲▲▲▲▲▲▲▲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 상품 ▲▲▲▲▲▲▲▲▲▲의 상품출시 적정성 검토절차를 생략하였음

* 20xx.x.xx. 「□□□□□□□□□□ ▲▲▲▲▲▲▲▲▲▲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대상이 변경될 수 있는 상품(블라인드상품)은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에서 검토승인 하도록 함

② ■■■■■■의 상품출시 적정성 검토기준 및 업무절차 미마련

- ●●펀드에 대하여 ▲▲▲▲▲▲▲▲▲▲의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하고 상품출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검토기준 및 업무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아니하여

- ▼▼▼▼▼▼는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군, 투자비중 등 운용전략과 만기 미스매칭, TRS 레버리지의 활용 등 투자위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없이 “리스크 존재 여부의 판단을 보류”하는 등 상품출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펀드를 선정·판매하였고
- ▼▼▼▼▼▼의 상품 적정성 검토 및 승인 여부가 통보되기도 전에 2개 펀드가 출시되기도 하였음

③ 상품제안서 심의 관련 세부적 업무절차 미마련

-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품제안서 심의를 적정하고 시의성 있게 하기 위한 세부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 상품제안서에 TRS 레버리지, 모자(母子)구조 및 이와 관련한 투자위험 등이 불충분하게 기재되었음에도 △△△△△△△는 심의과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지 못하였으며, 상품제안서 심의가 완료되기 전에 2개 펀드가 출시되기도 하였음

④ 사모펀드 판매 관련 위험관리 및 소비자보호업무 관련 규정 등 미마련

- 사모펀드 판매 이후 펀드운용 및 편입자산 모니터링 등 사모펀드 위험관리 업무와 투자자에 대한 사모펀드 정보제공 등 소비자보호업무 관련 규정, 이를 수행할 조직에 대한 업무범위 및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 ◇◇◇◇◇는 판매좌수, 수익률 현황 등 형식적인 사항만을 체크하고 투자구조, 신탁재산명세 파악 등의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20xx.x월 ~20xx.x월 기간 중 x차례 정기보고를 누락하였음
- 또한 ◇◇◇◇◇는 펀드 판매과정 및 이후 내부 전산시스템의 펀드별 수익자 자료를 통해 ●●펀드 간 모자형 구조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판매한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으로 투자전략이 변경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 20xx.x월 ▼▼▼▼▼는 업무과정에서 모자형 구조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도 추가적인 확인·검토 및 관련 부서와 공유를 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의 검토 및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2) 영업점 통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① 영업점의 금융상품 판매 및 홍보 등에 대한 세부기준 미마련

□ 영업점의 금융상품 판매 및 홍보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 ◆◆◆◆◆의 금융상품 판매규모가 크게 증가*[판매 잔액 : ▷,▷▷▷억원(20xx년말)→▶조▶,▶▶▶억원(20xx년말)]하였고, 마케팅 활동을 위한 대외행사비도 쏠지점 평균의 세 배를 상회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토·통제가 필요하였음에도 통상의 내부감사 이외의 점검은 없었으며

* ◆◆◆◆◆는 판매실적 등에 따른 지점순위에서 20xx년 3그룹에서 20xx년 1그룹으로 상승하며 4차례 우수 영업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 이에 따라 본사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품 설명자료, 발표자료 등이 활용되면서 부당권유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고
- ◆◆◆◆◆가 20xx.x월 4차례의 고객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펀드 환매를 보류하도록 유도하였음에도 본사는 설명회 개최 사실조차 사전에 알지 못하는 등 지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관련법규 >

1.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
3. 「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관계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별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25.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허.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6호	5,000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한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 금융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2.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정책과	금융투자검사1국
연 락 처	02-2100-2892	02-3145-7030